

## 제1차 정신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결의문

1992년 8월 10~11일 서울에서 열린 “정신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 한국, 필리핀, 대만, 태국, 홍콩, 일본 등 6개국에서 참가한 우리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전쟁에 의한 여성의 성적 노예화와 인간 존엄성 말살에 심각성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인 국가권력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강제 연행, 윤간, 고문, 학살 등 전대미문의 잔학한 범죄이다. 이것은 가부장제와 군국주의 전쟁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간성을 말살하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우리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야말로 전쟁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지난 7월 6일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형식적인 사죄에 그치고 과거 스스로 저지른 죄과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은 채 전후 처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PKO법안을 통과시켜 자위대 해외 파병의 길을 열어 놓은데 대해 우리는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아시아 여러 나라의 진정한 이웃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그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종군위안부문제를 비롯한 전후 처리에 대해 책임있는 태도로 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북한, 중국, 대만,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일본 등 아시아 각국에서 힘쓰고 있는 모든 민간단체 및 개인들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오늘 이 회의에 모인 한국, 대만, 필리핀, 홍콩, 태국, 일본 6개국 대표들은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 아세아 연대”를 결성했다. 이 아시아 연대를 통해서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음과 같은 행동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1.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전쟁 때 아시아 전역에서 일본이 저지른 강제종군 위안부 실태조사를 계속한다.
2. 우리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배상, 보상, 역사교과서 시정 등 일본의 책임있는 전후 처리를 촉구한다.

3. 우리는 유엔을 위시하여 세계인권기구들에게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한다.

4. 우리는 금번 회의에 참가하지 못한 아시아 여러 나라들도 아시아 연대에 참가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아시아 연성의 인권 신장과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의 참석자들은 일본 정부가 참회의 표현으로 다음과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도록 촉구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임무라고 생각한다.

1. 일본 정부는 아시아 여러 나라의 여성들을 종군 위안부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2.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문제”의 전모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전쟁에 의해 발생한 그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3. 일본 정부는 아시아 사람들, 특별히 아시아 여성들에게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인권 기준을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개별 희생자들과 아시아 각국의 여성들에게 완전하고도 납득할 만한 완전한 공개사죄를 하여야 한다.

4. 일본 정부는 “강제 종군 위안부” 생존자들과 그 가족에게 국제법에 따라 배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일본 정부는 일본군이 아시아 나라들을 침략하여 “강제 종군 위안부”라는 이름 하에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 연행, 매춘을 강요하고, 인권을 유린한 사실을 일본 학교 교과서에 명기하여 가르쳐야 한다.

1992년 8월 11일

“정신대 문제 아시아 연대 회의” 참석자 일동